

## 남북한 화해-협력과 제주도

양길현\*

1)

### 1. 남북한 화해-협력 시대의 개막

2000년 6월 13일 평양의 순안공항에서 남북한 두 정상의 만남은 분명 역사적인 사건이다. 분단 반세기 동안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결과 반목을 일삼아 왔던 남북한이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도 이제 탈냉전의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불신과 김정일에 대한 의구심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6월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8월에 이루어지고 9월에는 김용순 대남담당 당비서가 남쪽을 찾았고, 시드니 올림픽에 남북한이 동시 입장도 했다. 또한 9월에는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의 일환으로 우선 남측 관광단이 백두산을 관광하고 돌아왔다. 3차례에 걸친 남북 장관급회담에 이어 내년 봄에는 김정일의 서울담방이 예정되는 등 최근 일련의 남북한 접촉은 남북한이 화해-협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하고 있다.

#### 1) 90년대 남북한관계 성과들의 축적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남북한 화해-협력의 개막은 만시지단의 것이다. 세계적 차원의 탈냉전이 진전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남과 북이 여전히 냉전적 대결을 종식시키지 못한 데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그 이유를 지난 50년간 한반도에 3가지 차원의 냉전적 대결, 즉 국제적 수준과 동아시아 수준 그리고 국내적 수준이 중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 놓았다.(박명림 1997, 42-46) 이에 따르면 세계적 차원의 미-소 대결은 해소되었지만,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미-중을 중심으로 하여 미-소, 중-일, 소-일, 중-대만간의 압투가 여전히 간접적으로라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한,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소위 '분단체제'(백낙청 1994)로 지칭되는 특유의 적대적 상호의존이 남북한관계의 특성을 규정하고 있는 한, 한반도의 탈냉전 내지는 평화체제 구축은 요원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역사는 지난 10년 동안 그냥 멈춰 있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탈냉전 진행의 비동시성"(이종석 1998, 39)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의 남북한관계를 돌아보면 보면, 물론 특히 핵사찰을 둘러싼 북미간의 시소오 게임을 비롯하여 남한의 대북 정책이 있어서도 "북한의 안보논리와 미국 및 남한의 탈냉전논리가 만부딪쳐"(양길현 1999, 341) 서로 상호 조정되지 않은 가운데 술한 우여곡절을 거치기는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2000년 화해-협력의 시대가 열릴 수 있는 준비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 가운데 1991년 가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이어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것은 한반도의 탈냉전 가능성을 시사한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87년 이후 90년대 남한의 정치적 민주화 진전은 남한과 북한 모두로 하여금 국내적 수준에서의 적대적 상호의존 전략을 무용화 시켜 버렸다. 더욱이 한 때 남북한관계의 극적인 진전 가능성을 보였던 1994년의 김일성-김영삼 정상회담이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된 것은 하나의 아쉬움이었지만, 그러한 아쉬움과 남북한 모두의 필요성 인식은 2000년 남북한 정상회담을 가능토록 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1998년 이후 김대중정부는 평화공존의 맥락에서 대북포용정책의 국내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고 동시에 김정일정부 역시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민과 당-군의 지지를 획득하여 체제안정화에 성공을 거둔 것도 남북한 화해-협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2) 동아시아 역학구조상의 목표 조정

미-소 대결로 상징되는 세계적 냉전이 종식된 이후 지난 10년간 세계는 소위 '단극다중심체제'(unipolycentrism)로 재정립되었다.<sup>1)</sup> 단극다중심체 하의 동아시아 역학관계를 보면,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간의 관계는 이익과 쟁점에 따라 견제와 협력이라

\* 제주대 윤리교육과 교수

1) 신국제질서의 태동과 관련하여 강대국들간의 다중심 보다는 미국의 헤게모니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박건영은 현금의 세계질서를 "미국 중

는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물론 1990년 이전 냉전 시대의 동아시아 질서가 갈등과 대립을 우선축으로 하고 있었다면, 1990년 이후는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더 강조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지난 10년간 강대간의 견제와 협력이라는 양면성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한관계도 동아시아 강대국간의 유동적인 관계와 상호 조응 하면서 또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사안과 쟁점에 따라 부침을 하게 된다. 이렇듯 지난 10년간 남북한관계는 동아시아 역학구도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국제화된 한반도문제'라는 차원에서 강대국들의 이익에 이용되는 피동성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이제 남북한은 화해-협력의 개막으로 인해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통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동아시아 역학구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아태평화재단 2000, 72)

이렇게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0년간 동아시아 강대국간 질서의 중심축을 이루어 왔던 미-중관계가 내용과 질에서 일정한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90년대 10년간 동아시아에서 미-중관계 역시 견제와 협조라는 양면성을 보여 왔다.(양길현 2000) 즉, 한편으로는 여전히 중국식 사회주의를 내걸고 있는 중국과 미국식 자본주의를 모델로 제시하는 미국간의 암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제국주의의 패권을 견제하려는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 세계시장을 주도해 나가려는 미국은 드러내 보이지는 않지만 상호간에 치열한 견제의 자색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국과 미국 모두 세계시장의 역동성과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흔들리게 되는 데 따른 위험성과 피해를 너무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평화와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서로 협조하고, 특히 중국인 경우 이 문제에 한해서는 필요하다면 미국의 패권적 역할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북한이 생존을 위해 추구한 버랑끝 외교가 차츰 동아시아의 불안정과 전쟁 위험성을 가져오게 되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모두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을 '예측 불가능한 문제 국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아태평화재단 2000, 73) 동아시아의 안정=자국의 이익이라는 공식하에 북한의 안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동아시아 역학구도에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평화공존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광범위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로써 김정일정권은 김일성 사후 야기된 체제 및 정권의 생존 문제로부터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김대중정부의 포용정책에 화답을 하게 되는 상호 호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2000년 남북한 화해-협력 시대의 개막은 바로 이와 같은 미-중관계의 양면성 가운데 안정 지향적인 협조적 정향이 함축하고 있는, 이른바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의 감소와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평화공존 및 화해-협력, 그리고 동아시아내 시장경제의 안정 및 자유무역의 활성화에 조응하려는 남북한 모두의 생존전략이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 2. 남북한 화해-협력과 평화의 섬 제주: '제3수도론'

2000년 남북한 화해-협력의 개막이 세계적 탈냉전 이후 지난 10년간 남북한간의 '분단체제'가 서서히 동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본다면, 다른 측면에서 남북한 화해-협력의 개막은 한반도의 냉전을 규정했던 또 하나의 축인 미-중간의 동아시아 대결구도가

변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시작에서 제주도는 1991년에 이미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제주 방문을 통하여 장차 평화의 섬으로 역할할 수 있는 위상을 부여받았었다. 그 이후 제주도민들은 21세기 제주도의 미래와 관련하여 '평화의 섬' 만들기에 많은 논의와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다.<sup>2)</sup> 다만 지난 10년 간 아직 탈냉전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반도 상의 냉전적 대결구도로부터 제주 평화의 섬이 제약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 6월 정상회담 이후 이제 제주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한 화해-협력 시대에 동참하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남북한 화해-협력과 동북아의 평화에 제주가 참여하고 역할할 수 있는 가능 영역은 무엇일까?<sup>3)</sup>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소위 "평화의 섬: 제3수도론"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000년 6월 15일 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은 "적대서 동반자 관계로"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고 본다면, 이는 지난날 상대방 거부와 제거를 목표로 삼던 통일이 아니라 "공존과정으로서의 통일"(안병준 2000) 내지는 "체제인정과 공존공영의 단계를 통

1) 심의 일극체제이며,"(박건영 1999, 52) 특히 동북아시아의 경우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취약성이 노정되자 더욱 더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의 성향을 강하게 띠고"(Park and Lee 1999, 7)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 1996년 제주의 발전방향에 대한 도민인식조사를 보면 제주사회가 나아갈 방향으로서 '평화의 섬'이 25%로 가장 높았다.(김항원 외 2000, 107-110)

3)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성준(2000, 15 표1 참조)은 '자연·문화·인간이 공존과 번영을 구가하는 평화의 섬'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고창훈(2000)은 "남북통일을 위한 6개국(2+4) 평화섬 조직위 유치"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김진호(2000)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이념으로서 평화의 섬을 강조하고 있다.

해 통일을 지향하는 방식에 합의”(김근식 2000.7. 15)를 이룬 것으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와 화해와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역사적 의미”(장명봉 2000. 1)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6.15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한이 이제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며 공존하는 자세를 일단 취한 다음 연방이나 연합을 통해 점진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합의했다는 점에서 2000년 현 남북 화해-협력 시대란 “통일이 이루어져 가는 시대”(김기협 2000. 7)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그에 따라 특히 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향후 어떤 형태의 공통점을 상호 수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sup>4)</sup>

2000년 현재 남한정부의 공식적 통일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연합제안은 남북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남북연합단계를 설정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이는 1연합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정부의 공식으로 요약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쟁점은 남한의 연합제와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되고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999년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 중 “잠정적으로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2000년 10월 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시 20돐 기념 평양시 보고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장명봉 2000. 8) 이렇게 본다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지역자치정부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등 과도기적 단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1민족 1국가 2체제 2지역자치정부라는 공식으로 요약되는 기존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과는 일정한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지역자치정부의 권한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이 후 분단고착화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치정부가 주권을 그대로 갖는 동시에 그러한 평화공존의 남과 북을 아우르는 느슨한 형태의 법적-상징적 우산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과제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남과 북은 남북연합기구<sup>5)</sup> 내지는 민족통일기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sup>6)</sup>

남북 화해-협력 시대에 제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필자의 방안 제시는 기실은 바로 이렇게 남과 북이 동시에 과도기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연합제-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어떻게 ‘민족연합기구’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즉 과도기적 단계의 ‘민족연합기구’를 제주도에 설치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제안이다. 과도기적 단계에서 남의 수도는 서울이고 북의 수도가 평양이라면, 또 하나의 과도기적 민족연합기구가 설치될 제주도를 또 하나의 상징적인 제3의 수도로 설정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제안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화해-협력 시대의 개막이 기본적으로 남북한간 균형에 근거를 두는 것이어야 한다면, 과도기적인 상징적 기구로서의 ‘민족연합기구’는 한반도의 어느 남쪽이나 북쪽에 두는 것 보다는 한반도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제주도가 지정학적 위치상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둘째, 남과 북의 여러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제주도는 지역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남과 북 어느 자치단체로부터도 정치적으로 견제를 받을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너무 작지도 않아서 남과 북을 아우르는 ‘민족연합기구’가 적절히 작동하기가 부족함이 없다는 점에서 규모의 최적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셋째, 주지하다시피 제주도는 1991년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의 방문 이후 동북아와 한반도의 탈냉전 내지는 화해-협력을 추동해 나가는 장으로서 역할할 수도 있는 여지를 부여받았었다. 그 이후 95년 중국의 장쩌민 국가주석, 96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99년 일본의 오부찌 총리 등 강대국 정상들이 제주를 방문했고, 2001년에는 북한의 김정일이 제주와 한라산을 선호하여 제주도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sup>7)</sup> 이렇게 제주도가 동북아와 한반도의 화해-협력으로 나아가는 도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 앞으로 이러한 여건이 보다 유효하게 작동하고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해 주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다.

넷째, 제주도는 천혜의 관광지로서 남과 북의 한민족 모두가 오가고 싶은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제주도에 ‘민족연합기구’를 설치하여 남과 북의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관광도 즐기면서 남과 북의 현안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어 의논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데 제주도가 최적의 장소가 아니냐는 것이다.

다섯째, 물론 제주도는 한반도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지역적 거리 때문에 교통-통신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없는 것은

4) 북한이 높은 수준의 연방제에서 느슨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선회하게 된 데에는 양 체제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이 북한체제의 유지와 위기극복에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해석되고 있지만(김근식 2000.7. 16), 반면 이러한 북한의 선회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서 향후 남북한간 화해-협력 방식에서 연합제의 역할 영역을 중대시하는 데로 나아갈 소지가 크다고 볼 것이다.

5) 참고로 김대중대통령이 구상하는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연합기구로는 남북연합정상회의, 남북연합자료회의, 남북연합회의, 남북연합회의사무국, 분야별남북연합위원회 등을 들고 있다.(장명봉 2000. 8)

6) 서울의 편의를 위해서 남북연합기구든 민족통일기구든 이러한 기구를 여기서는 민족연합기구라는 용어로 단일화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7) 제주도가 지난 10년간 한반도 관련 국가 정상들이 자주 방문을 하게 된 데에는 제주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방문했다는 생색은 내면서도 그 중심부를 방문한 것은 아니고 지나치는 길에 살짝 들렀다는 정도로 발을 댈 수 있”(김기협 2000. 7)다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고려와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겠다.

아니지만, 다행히도 최근 인터넷과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이러한 비용은 상당한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상은 손상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볼 것이다.

여섯째,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은 향후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이주해 살기 전에 일정한 적응 기간이 필요할 때 또는 남한의 기술을 배우고 지식-정보를 획득해 나갈 수 있도록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는 등 교류-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나갈 때 과도기적으로 하나의 북한 관련 특구로서 역할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도 고려에 넣을 수 있다.

### 3. 프롤로그

1999년 12월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2조는 “국가는 세계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道)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8)</sup> 이렇게 평화의 섬 지정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포함하는 세계적 차원의 평화를 위해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모종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2000년 10월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제주지역 발전방안 조사에서도 제주도민들은 남북교류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감귤보내기, 씨감자 보내기와 같은 민간차원의 경제교류 확대(23.7%)와 이산가족면회소 설치(22.0%)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표하고 있다.(양길현 2000.11. 6)

이렇게 본다면 남북화해-협력 시대가 개막되면서 제주도가 제주도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기여할 수 있는 가능 영역으로서 단기적으로는 감귤보내기 등의 민간교류 확대와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제주도에 민족연합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고성준. 2000. “통일시대 제주의 위상과 실천과제.” 2000년 11월 25일 제주문화포럼 주최 <통일시대와 제주도의 위상> 심포지엄에서의 발표 논문.
- 고창훈. 2000. “평화섬 정책의 근거들과 실천논리.” 2000년 10월 14일 제주대학교 5개연구소 공동 주최 주최 <섬과 대륙의 공영> 국제학술회의에서의 발표 논문.
- 김근식. 2000.7.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성 인정-통일접근 방식과 평화공존에 합의.” <아태평화포럼>, 제39호, 2000년 7월호.
- 김기협. 2000. “섬의 운명.” 2000년 11월 25일 제주문화포럼 주최 <통일시대와 제주도의 위상> 심포지엄에서의 발표 논문.
- 김세택. 2000. “제주 평화의 섬 지정 필요성.” 2000년 10월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방송인크럽이 공동 주최한 <제주 평화의 섬 지정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세미나에서의 발표 논문.
- 김부찬. 2000. “제주 평화의 섬 지정과 실천전략.” 2000년 10월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방송인크럽이 공동 주최한 <제주 평화의 섬 지정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세미나에서의 발표 논문.
- 김진호. 2000. “제주 국제자유도시 이념으로서의 평화의 섬.” 2000년 4월 재외제주도민회협의회의와 제주국제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새천년, 새제주-백만 제주인의 힘과 대응전략> 학술대회에서의 발표 논문.
- 김향원 외. 2000.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 박건영. 1999. <한반도의 국제정치>. 서울: 오름.
- 박명림. 1997. “분단질서의 구조와 변화.” <국가전략>(세종연구소), 제3권 1호.
- 백낙청. 1994.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아태평화재단. 2000. <남북정상회담: 이해의 길잡이>. 서울: 아태평화재단.
- 안병준.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공존공영의 동반자로.” 2000년 6월 20일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전망> 2000년 춘계학술대회에서의 발표 논문.
- 안영훈. 2000. “제주 평화의 섬 지정과 국제교류.협력.” 2000년 10월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방송인크럽 주최 <제주 평화의 섬 지정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세미나에서의 발표 논문.
- 양길현. 1999. “통일을 위한 평화공존: 1990년대 남북한관계의 성찰을 중심으로.” <북한조사연구>(통일정책연구소), 제2권 제2호.

8) 제주 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하여 2000년 10월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 평화의 섬 지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는데, 여기서 김세택(2000)은 제주 평화의 섬 지정이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 김부찬(2000)은 제주 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한 실천전략을 그리고 안영훈(2000)은 제주 평화의 섬에 기초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양길현. 2000. "21세기 한중관계의 기회요인과 제약요인 분석," 2000년 10월 6일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 〈2000 추계학술회의〉 발표 논문.
- 양길현. 2000.11.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제주지역 발전방안 조사 보고서〉.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서울: 한울.
- 장명봉. 2000. "통일방안으로서의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통일방안의 대안모색을 위하여," 2000년 10월 27일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주최 동아시아 연구포럼에서의 발표 논문.
- Park, Kun Young and Lee, Wang Hwi. 1999. "The Financial Crisis of 1997-8 and Its Impact on the Security Relations in East Asia." paper presented t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ynamics of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May 27-28, co-organized by The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The Graduate School of North Korea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and Center for Asian Studies, American University.